

■ 주요 뉴스: 연준의 주요 인사,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

- 영국 트러스 총리, 사임 표명. 차기 총리는 10/28일 이내에 선출 예정
- 중국 인민은행, 2개월 연속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. 향후에는 인하 예상
- 일본은행, 금리안정을 위해 긴급 국채매입을 결정. 실제 효과 여부는 불확실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0.8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9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 총리 사임에 따른 시장 안정 기대 등으로 0.3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차익매물 출회 등이 배경
유로화가는 0.1% 상승, 엔화는 0.2% 절하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30.5원, -2.9원) 0.2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10/20일	10/19일	전일대비			10/20일	10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665.8	3,695.2	-0.80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3%	4.13%	9bp
	유럽	398.77	397.73	0.26%		독일	2.40%	2.38%	3bp
	중국	3,035.1	3,044.4	-0.31%		영국	3.91%	3.88%	4bp
	일본	27,007	27,257	-0.92%	CDS 5y	한국	62bp	59bp	3bp
	한국	2,218.1	2,237.4	-0.86%		중국	115bp	110bp	5bp
환율	달러지수	112.85	112.98	-0.12%	위험 지표	EMBI+	-	471	-
	유로화	0.9786	0.9773	0.13%		VIX	29.98	30.76	-2.54%
	엔화	150.15	149.90	-0.17%		WTI유	85.98	85.55	0.50%
	위안화	7.2145	7.2287	0.20%	원자재	구리	341.1	331.8	2.79%
	원화	1,433.3	1,426.2	-0.50%		금	1,628.0	1,629.4	-0.0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의 주요 인사,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

- 필라델피아 연은의 하커 총재는 인플레이션 고려 시 금리인상 기초를 유지해야 하며,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성장을 늦추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. 특히 연말에 연방기금금리가 4%를 크게 넘어설 수도 있다고 언급. 다만 내년이 되면 금리인상을 멈추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첨언
- 연준의 쿡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. 또한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며, 양호한 노동시장을 고려 시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부연
- 시카고 연은의 에반스 총재도 금리인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피력. 다만 연준이 내년 연방기금금리를 4.6%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, 만일 그 수준 이상으로 인상된다면 부정적 영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
- 한편 10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1.4만건으로 전주(22.6만건) 대비 감소. 이는 노동수급의 불균형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연준의 통화긴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지지
- 이날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으로 2년물 및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(각각 4.61% +5bp, 4.23% +9bp). 이는 11월과 12월 FOMC에서 모두 0.75%p씩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(OANDA의 Edward Moya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9월 기존주택 판매, 전월비 감소. 금리인상 등으로 향후 전망도 부정적

- 9월 기존주택 판매는 연환산 471만채로 전월(478만채) 및 예상치(470만채) 하회. 9월 이후 모기지금리의 상승을 고려 시 당분간 해당 판매는 감소세 유지될 전망. 다만 재고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

■ 영국 트러스 총리, 사임 표명. 차기 총리는 10/28일 이내에 선출 예정

- 감세와 고성장을 이행하기 위해 총리로 선출되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발언. 시장에서는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여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평가. 사임 발표 이후 투자자의 안도감 등으로 파운드화는 소폭 강세

■ 영란은행 부총재, 금리인상은 시장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

- 브로드벤트 부총재는 영란은행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발언.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지만, 이는 수요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

■ 중국 인민은행, 2개월 연속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. 향후에는 인하 예상

- 1년 및 5년 LPR을 각각 3.65%, 4.30%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시장 전망에 부합. 하지만 인민은행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, 향후 LPR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(ANZ의 Xing Zhaopeng)

■ 일본은행, 금리안정을 위해 긴급 국채매입을 결정. 실제 효과 여부는 불확실

- 10/20일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상한선으로 제시한 0.25%를 넘어서자 2500억엔 규모로 5년~25년물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. 이는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기 위한 의도이나 최근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매우 강해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소지(Mitsubishi UFJ)

■ 일본 '22 회계연도 상반기 무역적자, 집계 시작 후 최대. 엔화 약세 등이 영향

- 상반기(4~9월) 무역수지는 11조엔 적자를 나타내 1979년 이후 최대 규모.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 등이 영향. 엔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지만,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 등이 더욱 부각
- 일본의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액 증가는 가계의 지출 부담 가중 및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하며, 향후 경기침체로 연결될 우려(Norinchukin Research)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: -8.7, 9월(-9.9), 예상치(-5)
- 독일 9월 생산자물가(전년동월비): 45.8%, 8월(45.8%), 예상치(44.7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21 현지시각 기준)

-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강연, 독일 중앙은행 월간 보고서
-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, 일본 9월 소비자물가, 영국 9월 소매매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물가 예측 오류의 반복, 다발적 충격에 대한 과소평가 등에 기인 - The Economist

(Why inflation refuses to go away)

- 인플레이션이 '21년부터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연준, IMF 등 대부분이 물가 예측에 실패했으며 IMF는 그 원인으로 다발적 충격, 임금, 기대 인플레이션 제시
- 첫째, 다발적 충격의 영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'21년은 근원 물가, '22년은 식품 및 에너지 물가에 대한 예측 오류가 확대. IMF에 따르면, '21년 생산차질 및 원자재가 상승은 팬데믹 이전 추세 대비 미국 물가 상승분의 40%, 유로존의 66%를 차지했으며 경기부양책에 따른 가계지출 영향은 약 30%를 차지
- 둘째, 노동공급의 더딘 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이 서비스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. 다만,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여 임금-물가 악순환 위험이 높지 않은 점은 긍정적
- 셋째, 최근 물가상황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소지. 특히 미국과 달리 영국, EU 등에서는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시현

■ 미국 노동시장, 경기침체 없이 적정 수준으로의 회귀는 기대난 - 블룸버그

(US Insight: Hitting 2% Inflation Means String of -90k Jobs Prints)

- 경제활동참가율의 둔화,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과열 혹은 침체 없는 적정한 수준의 일자리 증가는 매월 약 35,000개로 추정
- 현재의 노동시장 과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1년간 월 평균 약 35,000개, 고물가 고착화 위험이 커질 경우에는 약 90,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경기침체 없이 고용 정상화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

■ 시진핑 3기의 중국, 서방과의 대결구도 강화 속 경제전망은 악화 - WSJ

(Why Another Xi Jinping Term Might Be in U.S.'s Interest)

- 대부분의 중국 분석가들은 서방의 대중 견제 강화,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시진핑 체제가 중국의 장기 전망을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최소 경제적으로는 미국에게 유리한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
- 그러나 중국의 장기 전망이 악화되더라도 세계 2위의 경제력과 군사대국이라는 점, 시진핑의 대결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대외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

■ 양적완화 중단, 민간 투자자들의 익숙함 등이 장애물로 작용 - 블룸버그

(Why Breaking the QE Addiction Is Such a Struggle)

- 일본만의 특수한 사례로 여겨졌던 양적완화는 '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편적인 수단으로 정착. 효과도 컸지만,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연준과 호주 중앙은행 등이 양적완화를 종료
- 前 인도 중앙은행 라잔 총재는 민간부문이 양적완화의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설명. 영란은행이 통화긴축을 추진하는 상황임에도 국채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
-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매파적 정책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커졌으나, 현 상황에서 양적완화 시행 기준의 과도한 강화는 부적절. 양적완화는 여전히 극단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

■ 미국 행정부의 중국 무역 제재,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소지 - Financial Times

(Biden goes it alone in his trade assault on China)

-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제재는 이전 트럼프 정부보다 강한 편. 이는 중국의 보복을 유발하거나 기술자립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. 또한 동맹국과의 협의 부족에 따른 무역 및 기술 관련 갈등도 촉발할 우려
- 예를 들어,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 이후 EU를 포함한 동맹국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일부는 WTO 소송 등을 검토. 이에 동맹국 간 세금우대 등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가 효과적인 무역정책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

■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, 종료 시 영국과 유사한 혼란을 초래할 전망 - 블룸버그

(Violent Market Swings Await the Day the BOJ's Yield Anchor Lifts)

■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, 비축량 부족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효과도 점차 감소 예상 - WSI

(Biden's Oil Price Machinations)

■ 영국 국채시장의 수급, 재정건전성에 크게 좌우 - 블룸버그

(UK Gilts Care More About Supply Than Who's Prime Minister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